



김 옹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11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지난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었고, OECD 국가들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가 정책적 화두로 제시되면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조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 복지예산을 전년대비 6.3% 증가한 86.4조원으로 확정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며, 보육, 아동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분야의 ‘서민희망 8대 과제’에는 32.2조원을 편성하였다. 노인인구 등 복지대상계층이 증가되고 있는데

다, 경제여건도 2010년보다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정책의 끈을 강하게 당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예산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한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은 전체 가정의 50%에서 70%로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50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3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도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시에도 이제까지는 정액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휴직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최대 100만원) 바뀐다. 또한 남성도 유급 3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출산·육아 여건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 등으

로 최근 출산율 저하 경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된다면 2011년에는 출산율이 미소하게나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 8.3조원, 기초노령연금 2.8조원이 지급되는 등 현금급여 지출이 늘어나고, 노인일자리 20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도 31만명으로 증가된다.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등 돌봄 서비스 대상도 17.6만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목할 만한 제도로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영농 경력이 5년 있으면 된다. 잠정적으로 계산하여 볼 때, 70세의 농민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망할 때까지 담보된 농지로 농사를 계속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급여수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2011년의 최저생계비는 월 1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높아지고 예산액은 7.3조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 상승 등으로 탈수급하더라도 의료 및 교육급여는 2년간 더 지속하도록 하여 탈빈곤 유인을 강화하고, 기초수급자의 근로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도 1.5만가구로 확대하여 자립자활 여건조성을 강화한다. 보금자리주택은 2010년의 18만호에 비하여 3만호가 늘어난 21만호가 공급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4천억원이 지원되고,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도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5.7조원이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도 1.1만호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후진국적인 질병의 전형인 결핵발생률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숙자 등 집중치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결핵환자 진료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 내 응급장비 확충, 119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11년 복지부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 문제이다. 2010년에는 재정적자가 1조 3천억원 내외로 예상되어 기존의 적립금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2011년에는 충분한 보험료 인상 혹은 정부지원 확대가 없을 경우 적립금의 완전소진과 진료비 지급불능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2008년 6.4%, 2009년 0%, 2010년 4.9%에 불과하였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추이를 볼 때, 13~14%의 보험료 수입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금 등 소득 지출 증가분을 5%로 잡았을 때, 이를 공제한 보험료 수입 증가분이 8~9%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당년도 수지균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5.9%의 인상에 그쳤다. 따라서 2011년 내내 불안한 보험재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이외 사회보험의 재정불안은 고용보험에서도 제기된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본연의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여가 증가하고 있어 적자 요인이 잠재

되어 있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급여 지출 등으로 10.4조원 가량이 풀리지만 연금보험료 수입은 26.3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의 증가로 15.9조원의 시중자금이 국민연금으로 흡입되었다가 국민연금 투자자금으로 환입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계속되는 현상으로서 민간저축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은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강제저축적 기능이 1988년의 국민연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2011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통합징수된다. 1999년부터 논란이 되어오다가 2008년에 가닥이 잡힌 보험료 통합징수는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된다. 보험료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부과기준의 단일화 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기준이 되어 왔던 임금총액 개념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과기준인 갑종근로소득세 과세 개념으로 일원화된다. 그리

고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통합 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납입시 제도마다 상이하여 겪어 왔던 기업의 불편이 상당히 제거된다. 하지만 보험료 일원화 과정에서 임금총액이 과세소득기준보다 낮았던 대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통합징수의 적응과정에서 과오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간의 논쟁이 가열되었고, 지자체별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이 증폭되었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의 기초에 대해 2011년에는 그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복지지출의 적정수준과 관련된 논쟁은 선진국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보면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선진 각국에서 국가재정의 적자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억제 또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수준의 접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